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돌아오는 농촌으로”

전남은 농도다. 하지만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전남의 고령화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구 유출도 인한 농촌의 붕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남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광주일보는 13일 지난 8월 취임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1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희망'과 '미래'를 강조했다. 또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혁신이 문재인 정부의 화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혁신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는가
-인식에서 혁신은 출발한다. 우선 농림축산부 공무원들부터 '농업·농촌 우선'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농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또 스마트 팜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농업에 미래가 있다면 청년 유입 등으로 농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갈 것이다.

▲장관으로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면.
-우선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후계 인력을 양성하겠다. 40세 이하 청년농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농민의 2% 이상으로 높이겠다. 이를 위해 농촌에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여기에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존의 역할을 부여하고 대농보다는 소농에 더욱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게 만들겠다. 또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

▲쌀 목표가격 20만 원대 진입은 가능한가.
-쉽지는 않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은 19만 4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 정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목표 가격 상승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안은 전년 대비 약 1% 정도 인상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등을 통해 3% 인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 관련 투자 비중을 늘리고 스마트 농업 확산, 생명산업 육성 및 연구 투자도 확대하겠다.

▲농도의 상징인 전남이 스마트-팜 혁신 벨리 사업 공모에서 탈락,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이 2차 공모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스마트 팜 혁신 벨리 사업은 청년 창업, 기술 혁신, 판로 개척 기능이 집약된 농산업 클러스터 개념으로 오는 2022년 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이 1차에 탈락한 이유는 너무 안이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다. 이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더 있다. 전남도 스스로가 탈락의 원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적극 보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차 공모에 나서야 한다.

스마트 팜 등 통해 농업 미래 개척
40세 이하 청년농 비중 2022년 2% ↑
쌀 직불제 소농중심 '공익형' 개편
국회 등과 협의의 쌀 목표가격 이룰 것

문화·주거·보육·복지 인프라 구축
'청년 보금자리' 4개소 시범 운영
해남군 시행 '농민수당' 의미 있어
비우량 농지 태양광발전 규제 완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 증가했으나 농촌 지역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40세 미만 농업인도 전체의 1%가 되지 않는다. 고령화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주거·보육·복지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4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또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창업 보육 등을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 당장 내년에 2천명의 청년농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한다면.
-현재의 직불제는 쌀 중심, 대농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보호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환경·사회 가치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 활동에 대해 직불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방향이다.

또 대농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소농에 대한 혜택은 늘인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의미 있는 시도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농업인의 기초소득보장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민수당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 농협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스마트 팜에 있는 온실 등을 사회적 농업 법인에 임대하는 방안도 있다. 지역 산·학·연이 함께하는 구조면 더욱 좋다. 특히, 사회적 농업은 결국 농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입장은.
-일단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은 보존하고 비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사를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실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북 경험에 대한 입장은.
-농업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일단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산림분야 협력이 추진 중이다. 여건이 개선된다면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울 수 있다. 다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례 제정 힘 모은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13일 한전 KDN 회의실(3층)에서 제2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유치 대상기관을 파악하고, 향후 이전기관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와 한전KDN이 공동 주관한 이번 실무위원회는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관련 지자체(7),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13)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공공기관장협의회 공동과제인 제4회 빛가람 페스티벌

개최,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이용 추진 현황과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 추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사·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제안 사항으로는 혁신도시공공기관장협의회에 남구 참여, 우편물 당일급급 가능 지역 개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소 이전 등이 발표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건설교통분야 국비 2667억 확보

지난해보다 1538억 늘어

전남도는 올해 건설교통 분야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국비(공기업 포함) 2667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3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는 도시재생사업 8곳 2017억원(공기업 1217억 원 포함), 소규모 재생사업 10곳 17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광역단체 중 경기 다음으로 사업비가 많다.

또 낙후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3곳 70억 원, 투자 선도시구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사업 100억 원, 공공임대주택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1곳 131억 원, 마을 정비형 사업 2곳 324억 원 등이다.

또 서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사업과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이 용역 사업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중 일부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성과는 민관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거나 현장, 발표평가에 대비해 전문가 전략회의, 모의연습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펼쳐온 것이 주요했다. 분석이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2019년 SOC(사회간접자본) 국고 예산과 생활밀착형 SOC 예산 포함 국비 1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모사업도 타 지역과 다른 체계적 전략을 수립해 전남에서 많은 지역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없는 쓸쓸한 죽음 안돼”

김기성 전남도의원 발의 장례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무연고자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기성 의원(담양·다봉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남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는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 마다 공영장례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지원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되,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례비(1인 75만원) 이상으로 지원토록 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신안군이 공영장례비(1인당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 절차도 없이 시신을 화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기성 의원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빈부격차를 떠나 도민들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보살펴줘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수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흥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 기보종합건설